

대마 직접 키워서 '텔레그램' 판매...간 큰 4인방 모두 실형

모친 허가 이용해 대마 몰래 판매 계획 재배·관리·판매 역할 나누고 이익 배분 "위법 아냐" 주장에도 법원 "유죄 인정"

가족 명의로 허가된 장소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해 온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 등 4명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경북 봉화군 소재한 거주지에서 각자 역할을 분담해 B(40)씨가 재배한 대마를 판매하기로 계획했다. B씨가 대마 재배·수확·건조하면, C(50)씨는 텔레그램 계정 내 광고 글을 보고 연락 온 구매자들과 거래 조건을 정했다. D(54)씨는 소분한 대마를 관리했으며, A씨는 포장된 대마를 구매자들에게 직접 만나 판매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말은 역할에 따라 수익금은 B씨가 50%, A씨가 20%, 나머지 두 사람이 각각 15%씩 나눠 갖기로 했다.

계획을 정한 후 이들 일당은 2022년 3~4월, 6월 수확에 걸쳐 수확에서 수백만원의 돈을 받고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된 제품 중에는 액상 대마가 담긴 전자담배 카트리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허가 없이 직접 대마를 재배하거나 액상 대마를 제조하기도 했다.

이들 4인방은 2022년 3월부터 6월 27일까지 봉화군 소재 B씨의 모친 명의로 허가 받은 대마 재배지 3006㎡(약 909평)에서 1~2m 대마 691주를 재배했다. B씨의 경우 같은 해 6월 자신의 주거지

에서 대마를 갈아 증류수, 프로필렌글리콜(PG) 등과 배합해 중탕시킨 대마 농축액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추출한 농축 오일에 식물성 글리세린(VG) 등을 섞어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약 16개 분량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다. B씨는 같은 해 6월 23일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흡연용 종이에 맡아 피웠다.

범행이 발각된 후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B씨 모친 명의로 적법하게 허가받은 장소에서 모친을 도와 대마를 재배했으므로 범법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모친은 피고인들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결국 처음부터 몰래 대마 잎을 채취해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재

배 행위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범법 위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들 일당의 수익금 배분 방식을 고려해 A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540만원, 72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나머지 두 사람 역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71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불복한 상태다. 검사와 A씨 등 피고인은 선고 직후인 지난달 초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이슬기자



붕괴 참사 1주기 코앞...규탄 나선 상인들

화정아이파크 피해상가 대책위원회가 10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HDC 현대산업개발을 규탄하며 생존권을 호소하고 있다.

'신변보호 피해자 스토킹 살인' 김병찬, 대법서 징역 40년 확정

1심 징역 35년→2심서 징역 40년

자신의 스토킹으로 인해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병찬은 지난 2021년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찬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A씨를 찾아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 요청을 보냈으나 경찰은 12분 뒤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치명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김병찬은 다음 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김병찬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 결과 범행 방법과 도구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

획적인 보복 살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1심은 김병찬이 흉기와 살해 방법을 미리 조사·준비했다며 계획적인 보복 살인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지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2심은 "피고인은 전 연인이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혔고, 공권력 개입 이후 구체적 살인 계획을 세우거나 피해자를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량은 40년으로 가중했다. 또 위지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명령을 유지했다. 뉴시스

전남도 '수입 소고기, 한우 둔갑'...설 성수기 특별단속한다

오는 20일까지 집중단속

전남도는 설 성수기 한우 유통업체와 한우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산 소고기 한우 둔갑과 등급 허위표시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20일까지 추진하는 이번 단속은 한우 취급 업체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한 소고기를 직접 수거해 유전자검사와 개체동일성검사를 실시한다.

한우로 둔갑 판매하거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

다.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한우 등급 허위 표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성수기에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한우 이력표시 위반단속을 하고 있다.

최근 단속 결과에 따르면 한우 둔갑 사례는 없지만 이력표시 관리가 소홀한 위반 사례가 있어 이력표시 관리 제도를 함께 추진

하고 있다.

임만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도민에게 공급하는 소고기의 신뢰도를 높이고, 한우 축산 농가 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지속적인 수입산 소고기 한우둔갑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생산자와 소비자 권의 보호를 위해선 도민 개개인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력표시가 의심되면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이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